

코로나19 시대의 국제정치 그리고 국제스포츠 이벤트



이정우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스포츠사회학 전공
스포츠외교, 국제스포츠관계, 스포츠메가이벤트에 관심
J.W.Lee@ed.ac.uk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고 있다. 그중 간과하면 안될 부분이 바로 국제환경의 변화다. 전 지구화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긴밀한 국제적 협업구조에 균열이 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자생적 국내시장의 유지가 국제무역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외교행위가 잦아지는 추세다. 다시 말해 대유행 가운데 국제질서는 공존과 협력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관계에서 자국 생존에 방점을 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로 그 무게의 추가 움직임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국제스포츠경기대회는 특히나 국제정치적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국제스포츠가



출처: shutterstock

특정 국가의 외교전략 일부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경을 초월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교류가 잦아지고, 다양한 수준에서 시민들 사이의 초국적 소통이 빈번해지면서, 외교적 창구가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변화는 외교적 활동이 국가 정상이나 공식 사절단 사이의 회의 및 문서교환으로 국한되었던 전통적 의미의 외교는 물론, 문화, 체육,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공공 및 민간차원의 국제적 접촉 역시 국가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하며 유지하는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가 간의 갈등이 점차 첨예해지는 최근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제스포츠 이벤트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친선을 도모하는 장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점차 두드러지는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을 그대로 투영하는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본 글에서는 우선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분석을 통해 지난 2021년 7월 개최된 2020도쿄올림픽에서 드러난 몇몇 외교 이슈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오늘날의 국제환경을 점검해보고, 이러한 사태가 2022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 시대 올림픽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규정해 보기로 한다.

2020 도쿄올림픽과 동아시아 지정학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올림픽 사상 최초로 그 일정이 연기된 대회다. 사실 2020 도쿄올림픽은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일본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영향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사업이다. 그러나 대회조직위원회는 준비기간부터 개최 비용의 상승과 국민의 저조한 관심으로 인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일본 시민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국경을 초월한 코로나19 감염병의 발발은 올림픽 준비에 큰 차질을 빚었고, 1년간의 대회 연기는 주최 측에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게다가 외국인 응원단과 관광객들의 일본 입국 전면 봉쇄로 인해 올림픽 특수로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은 거의 무산되었으며, 대회 기간 중 해외 방문객들에게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려는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진행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에 2020년 9월 아베 신조는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하였고, 따라서 그의 올림픽 드림은 코로나19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올림픽과 관련된 주변국가와의 관계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자. 이번 도쿄올림픽은 우선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과거사로 인한 마찰과 경제적 협력이 교차하는 긴밀하면서도 예민한 관계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왔기에, 최근 외교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다만, 당면한 외교문제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을 추려보면 첫째,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민간기업의 보상을 명령한 한국법원의 2018년 판결은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이어졌고 둘째, 2019년 9월 일본이 한국을 수출 허가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함에 따라 한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발발 초기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제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양국 외교적 문제의 심화는 물론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크게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몇몇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들 가운데 도쿄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오염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올림픽의 안전문제를 불참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와 “노 재팬”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의 만연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목소리 등장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2020년 3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올림픽대회의 연기를 공식화했을 때, 반일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올림픽이 아예 취소되기를 내심 바라기도 하였다.

2021년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체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일관계의 회복은 한국 측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았을 뿐, 한일 간 올림픽 협력 및 이를 통한 관계 개선 제안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 올림픽 개



출처: shutterstock

최가 다가옴에 따라 한일 양국은 개막식에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성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한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문제를 논의하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올림픽 귀빈으로만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무산되고 말았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또한 2021년 도쿄올림픽의 지정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의 영향과 남중국해와 인도차이나반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뻗어가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및 외교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이해에 반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일본이 다방면으로 거들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림픽이 개최되기 몇 주 전 일본은 만일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침략을 감행할 경우, 자위대를 보내 대만의 자주권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는 중일 관계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중국은 겉으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국의 주요 인사를 올림픽 개·폐회식에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코로나의 유행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수개월 내 열릴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

라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고위급 인사를 파송하지 않은 점은 불거지는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긴장감 도는 일본과 중국의 외교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고 말았다. 일본 언론사의 대만국가대표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대만의 선수들은 올림픽대회에서 중국이 이들의 독립된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공식적으로 차이니즈 타이베이란 이름으로 경기에 참석한다. 개막식 선수입장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일본NHK 방송의 아나운서가 중화민국 타이베이 선수들을 두고 대만국가대표팀이라고 소개하였고,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았다. 사실 대만에서는 올림픽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국호 사용을 바라는 열망이 있으며, 대만 내 여러 시민단체는 중화올림픽위원회에 “대만올림픽대표단”이란 명칭의 공식적 승인을 IOC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대만의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이는 양안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대만 입장에서 보면 커져만 가는 중국의 위협 가운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운동과 스포츠를 통한 국가정체성의 표현은 중요한 문화외교 행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방송사의 대만국가대표팀 언급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나아가 중국은 자신들의 영문 기관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올림픽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일본은 그 음모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코로나19는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하고 예민한 동아시아의 국가관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20년 도쿄올림픽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대유행 극복과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에서나 대만을 끼고 벌어지는 중일 관계에서나 크고 작은 동아시아 지정학의 파열음이 무성했던 대회라 할 수 있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과 국제적 패권주의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둔 오늘날의 국제정치 환경은 그다지 녹록지 못하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유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깊어지는 갈등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자국의 경제력과 이에 수반되는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제정치 패권에 점진적으로 도전해왔다. 특히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대륙 간 무역 활로의 개척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사력 확장을,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틀을 흔드는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응으로 미국은 자유무역원칙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경제규제를 강화하였고, 중국의 인권문제와 소수민족 탄압을 문제 삼아 이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우한지역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병하였고, 이는 곧 전 지구적 유행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두고 중국에 대유행의 전적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겠지만, 발생 초기 국가 간 투명한 정보교환이나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케나다 등지에서 중국에

대한 회의론을 촉발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불신 증가는 서구사회에서 중국의 인권탄압과 경제개입 등의 문제들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회의의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7월 유럽연합은 중국의 비민주적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구에서 반중국 정서가 만연하는 가운데, 영미권의 주요 정치인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중국의 2022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박탈하기 위한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이들은 중국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자국 선수단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거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국제스포츠경기대회를 자국의 변모하는 위상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십 수년간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렸거나 개최 예정인 국제대회를 살펴보면 2008베이징하계올림픽을 필두로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2014년징청소년올림픽, 2021청두유니버시아드,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그리고 2022항저우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08년 하계올림픽은 급부상하는 경제강국의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전파한 대회였으며, 2022년 동계올림픽은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대국의 모습을 여러 나라에 각인시키는 외교적 기회로 작동하는 측면이 강하다. 지난 2월 동계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두고 진행된 문화행사에는 멈춤 없이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력 그리고 친환경적 올림픽을 추구하는 혁신 노력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국제무대에서 강대국 중국의 외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물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질병 극복의 희망을 세계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내부의 분위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로부터 불어닥친 중국에 대한 불신감과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비판론은 중국 정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80여 인권단체들은 하나된 목소리로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문제로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각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서구의 유력 정치인들도 같은 입장에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영문 기관지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인권단체들을 “정체불명의 난동객”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동조하여 올림픽 참가 거부를 감행하는 국가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그러한 보복을 감행할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아무리 언론을 통한 내용이라지만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치고는 이례적으로 과격한 표현임이 틀림없다. 이는 중국에서 2022동계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경기대회 수준에 머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외교수단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구사회와 중국의 외교적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주중 미국대사로 지명된 니콜라스 번이 중국의 인권문제, 특히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결코 쉬운 미·중 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출처: shutterstock

그는 지난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0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중의 입국이 전면 통제된 상태에서 열리게 될 두 번째 코로나 올림픽인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두고,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역사상 가장 특이한 대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울러 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규제 없이 의사를 표현하고 언론들은 자유롭게 경기를 취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서구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서유럽, 북유럽 그리고 북미지역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대회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이 빙상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서양 선수들이 다수의 종목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도 만약 서구의 국가들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권과 인권 침해적인 정책을 문제 삼아 경기에 참여를 거부한다면 이는 2022 베이징올림픽이 가진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회의 개최를 통해 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격상승의 외교적 목표를 이루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국제관계에서 국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쉽게 예측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올림픽 지지 선언이나 주요국 스포츠기구의 대회 준비과정을 고려해 볼 때, 어느 국가든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 보이콧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오늘날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반 베이징올림픽 시위는 대회 개막이 다가올수록 그 목소리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선수단은 파견하면서도 올림픽 기간 중 자국의 고위급 인사들의 중국방문을 불허하는, 소위 우회적 보이콧을 감행하는 국가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또한 경기장 내부에서는 중국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이에 부정적인 서구 자유주의의 충돌이 선수들의 경합 그리고 이를 중계하는 언론을 통해 재현될 확률도 적지 않다. 즉, 국제질서의 갈등구조가 내년 2월까지 전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신냉전의 각축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